

Issue Comment

2024. 1. 23

통신서비스

정부, 단통법 폐지 방안 시사



통신/미디어/엔터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RA 김민영

02. 6454-4884

minyoung.kim02@meritz.co.kr

정부, 단통법 폐지를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시사

정부는 22일 열린 '제5차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 정부는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 한편, 같은 날 오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전함

단통법 폐지에도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유지한다는 계획. 단통법 폐지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모두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이미 여야 모두 총선 체제로 전환한 만큼 5월 임시국회 통과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현실적으로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실제 법안 폐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

시사점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 10년 전에는 3G 사업을 포기하고 LTE에 옮긴했던 LG유플러스로 인해 가입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었던 반면, 지금은 5G 서비스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과거와는 달리 크지 않음.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가입이 확대되고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점도 단통법 폐지 영향을 최소화. 단말기 제조사 입장에서도 과거 경쟁했던 LG전자와 팬택이 사라지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원금을 더 부담해야 할 이유가 부재.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 자체보다는 총선 전까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의지와 규제 리스크 지속 가능성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